

## ▣ 정책동향

### 산업자원부, 기술담보시험사업 개선방안 수립

산업자원부는 실물담보력이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97.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술담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99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산업자원부는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실물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의 기술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만큼 권리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기술담보 시험사업을 추진하여 '98. 12월말 현재 64개 중소기업에 137억원을 대출하였다.

'99년도에는 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담보 대출액 및 대상자금을 확대하고 취급은행에 지급하는 손실보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기술담보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술담보에 의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담보지원액을 '98년 200억원에서 '99년에는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하고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담보 대상사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99. 1월부터 시행하는 등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이 원하는 자금을 기술담보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담보 대상자금을 산업기술개발자금('99년 예산액 2,867억원) 및 산업기반기금('99년 예산액 3,620억원)에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중 구조개선자금('99년 예산액 5,700억원)까지 확대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취급은행의 기술담보 취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술담보 대출업체의 부도등으로 기술담보가 부실채권이 될 경우에 취급은행에 지급하는 손실보전율을 종전의 80%에서 90%로 확대하여 손실을 보전하고 기술담보 용자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산금리를 종전의 1.0%에서 0.5%로 조정하여 용자사업자의 이자부담을 줄였다.

이밖에도 기술담보 대출시 용자사업자의 대출기한을 1개월 추가로 연장해 주고, 기술담보취급은행을 용자취급은행 전체로 확대토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산업자원부에서는 실물담보력이 부족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담보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자원부, R&D 투자 많은 기업 세제 공제 확대

산업자원부는 기술인력 배분 효율화를 위해 매 출액대비 R&D(연구개발)투자 비중이 높은 업체

등 기술집약적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인력 수급효율화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재정경제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인력수급 효율화를 위한 제반 제도개선을 협의·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자부는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높은 기술집약적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대기업 5%, 중소기업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5% 이상 상향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현행 5년

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해 우수인력의 유인을 확대하고 전문연구요원의 동일법인체 내 전직금지제도 폐지, 전문연구요원의 국외여행 기간제한 폐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산자부가 산업연구원에 의뢰, 실시한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계 인력수요와 기술인력 공급상의 괴리로 인해 '99~2003년 기간중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의 산업기술인력 8만4천여명이 산업계 수요에 대비해 초과공급될 전망이다.

또 공학계 전공자도 같은 기간중 전공별·학력별로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는데 박사의 경우 2001년부터 대부분의 분야에서 공급부족이, 학사 및 석사는 전기·전자·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금속·재료, 식품·유전 등은 초과공급이 예상된다.

## 산업자원부, 中企에 10조 지원

산업자원부는 21세기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생물·신소재 등 27개 지식기반 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2년까지 2만5천개 업체에 총 10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공업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심의했다.

이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을 위해 직접금융 활성화, 벤처금융 확충, 신용대출 정착 등을 통해 신산업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향후 5년간 1조원을 투입, 신산업 창출에 핵심이 되는 103개 기술과제를 중점 개발해 나가는 한편 현재 운영중인 산업기술단지, 첨단과학단지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지식산업집적지를 조성, 지식산업 창출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 중소기업청, 지정계열화 업종 및 품목 정비

중소기업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지정계열화 업종 및 품목을 정비했다.

중소기업청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동안의 여건변화로 지정의미나 실효성이 없어진 12개 업종과 250개 품목을 해제하였다. 이들은 중소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모기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단체에는 불필요한 부담만 주고 있어 중소기업계가 해제를 요청해 온 품목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과 특히 대일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품, 소재의 국산화 촉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생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품목 25개를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계열화 품목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이로써 '98년도 지정계열화 업종과 품목은 현행 36개, 1,053개에서 24개, 838개로 각각 조정되

었다.

계열화 제도는 모기업체의 최종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물품, 부품, 반제품, 원료 등의 상당부분을 중소기업이 제조하고 있는 품목중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산화촉진,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분업화가 바람직한 품목을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제도로서 계열화 업종을 영위하는 모기업체는 계열화 품목의 제조를 중소기업에 위탁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계열화 제도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를 확보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계획생산과 경영안정을 돕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및 구조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정계열화 업종과 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열화를 추진하는 데·중소기업에게는 자금 및 세제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 수출유경험자 현장에 파견지원

중소기업청은 IMF체제 이후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상사 등에 근무하면서 많은 수출 경험을 쌓은 퇴직 수출유경험인력을 내년부터 중소기업 현장에 직접 파견하여 수출지원을 강

화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수출전문인력을 500명 이상을 1차로 모집하여 '99년부터 중소기업체에 파견지원을 개시하여 연간 4,000여개 업체에 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간 중소기업은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도 수출 실무지식이나 인력의 부족으로 해외시장 개척활동이나 해외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수출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종합상사, 무역대리점, 금융기관 등에서 실직한 수출관련 고급인력은 많으나 이들 전문인력을 위한 실업대책은 미비하여 이들의 경험과 지식이 사장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재취업 기회를 마련하고 창업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면 모두 대상이 되며, 수출지원센터에 신청을 통해 평균 1

개월에서 최장 3개월까지 파견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업체의 부담은 전혀 없다.

중소기업체는 수출실무 컨설팅에서 바이어 알선, 계약체결 등 수출관련 애로 및 지원수요에 대해서는 분야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의 애로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 수출유관기관의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장밀착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분야의 수출전문인력을 한팀으로 구성하여 한 개팀이 업체를 밀착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하여 공단내 수출상담실을 마련하여 무역상담과 현장순회 컨설팅 업무도 겸비하여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원 8,000억원 지원

중소기업청 금년도 신용보증예산 1조 2,000억원 중 8,000억원을 조기 배정하여 신용정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청의 '99년도 신용보증지원 대책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주로 운전자금 조달에 활용되어 온 일반보증금은 13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9% 증가한 규모이며, 수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98년부터 시행한 특별조

증금 16조 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으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충분한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대출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증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지원이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부분 보증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구상권 회수활동을 강화하여 정부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 국내외 조달 정보망 서비스 실시

중소기업청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인 등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발주하는 정보와 해외 각국의 입찰정보를 중소기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국내외 조달정보망」을 인터넷상에 구축하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내 입찰정보는 물품구매, 공사용역, 공사낙찰정보로 구분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외 입찰정보는 해외시장동향, 해외입찰정보 등으로 구성하여 각국의 주재관들이 입수한 해외 조달관련 정보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중소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체 정보에는 1,500여개의 중소기업 홈페이지와 그들이 생산하고 있는 8,600여개 상품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동 정보는 '99년까지 10,000개 중소기업 홈페이지와 50,000여개 상품정보를 수록하여 중소기업과 그들이 생산한 제품의 정보를 원하는 공공기관 등에게 제공하게 된다.

## 국립기술품질원, 독일 VDE와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약체결

국립기술품질원은 독일 전기기술자협회의시험·인증시험소(VDE Testing & Certification Institute)와 전기전자 제품의 시험·평가에 대한 상호인정을 합의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교환했다.

이에따라, EU 지역에 수출하는 국내 전기전자 업체들은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시험·평가에 합격하면 VDE의 시험·평가에 합격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돼 CE 및 VDE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

EU 국가는 자국의 산업보호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CE마킹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내 중소기업체에서는 CE

마킹 인증시험의 핵심인 전기 안전성 및 전자파 적합성(EMC) 시험을 위한 정밀측정 시설마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증 획득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CE 및 VDE마크 획득을 위한 시험수수료, 운송료, 출장비 등의 경비와 현지 시험·평가에 필요한 장기간의 시간소요는 우리 중소기업체의 큰 부담으로 되어 왔다.

이에 기술원이 CE 및 VDE마크 획득을 위한 시험·평가를 국내에서 가능하게 해줌으로서 우리 중소기업체들이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경제적, 시간적인 비용을 절감시켜 EU지역 수출에서 겪는 애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게 하였다.